2026.04.02.

국회예산정책처 | 나보포커스 | 제147호

nabo Focus

주요국 조세정책의 최신 트렌드 톺아보기 (2) –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

세제분석2과 신미정 분석관

논의의 배경

▪ **최근 주요국은 물가와 주거비 상승에 대한 대응, 탄소중립 및 국민건강 증진, 지역개발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소비세제 및 재산세제를 주로 활용**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으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
  - OECD[1]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2년 3분기 OECD 평균 10.28%에서 2025년 3분기 3.98%로 점차 안정세이나 2019년 4분기 1.89%보다는 높은 상황
- 또한, 전세계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도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지원 필요성도 증대되는 모습
- 한편, 주요국은 환경오염이나 비만·흡연·음주 등을 교정하기 위해 소비세제를 주로 활용

▪ **이하에서는 정책목표별 주요국의 소비세제와 재산세제 개편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물가상승 대응,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 탄소중립·건강, 지역균형개발 등 조세정책 목표별로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살펴봄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부담 완화

▪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식료품, 의료 등 생필품과 난방, 전기 등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소비세 부담을 완화**

- 캐나다, 핀란드, 영국 등은 가공식품, 아동의복, 도서, 생리용품 등 생필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전력 등 에너지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표 1]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국 소비세제 개편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부가가치세	(캐나다) 가공식품·아동의복·도서 등에 영세율 적용(2024.12.~2025.2.) (핀란드) 생리대·기저귀 세율 인하 (영국)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 (그리스) 외식업 세율 인하 (노르웨이) 수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20 → 15%) (슬로바키아) 전기·음료(20 → 19%) 및 의약품·도서(10 → 5%) 세율 인하 (포르투갈) 저사용 전력 세율 인하 범위 확대 (일반 100kWh·대가족 150kWh → 일반 200kWh·대가족 300kWh)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2025.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OECD Data Explorer 참고

주거비 부담완화 및 주택가격 안정화

▪ **임대료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및 보유세의 세부담을 완화**

- **(취득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세 면제 또는 인하
- **(보유세)**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 시 세부담 완화책으로 보유세 세율 하향 조정 또는 과세표준 상향 조정

[표 2]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요국 재산세제 개편 동향

구분	주요 내용
거래세	(포르투갈) 36세 미만 청년이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룩셈부르크)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과세표준 50% 축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확대
보유세	(싱가포르) 주택가격 상승 반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표구간 상향 조정 (마카오) 주택 실거주자에 재산세 공제제도 시행, 임대부동산 세율 하향조정(10→8%)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2025.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취득세)** 아일랜드는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및 추가과세
- **(양도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년 미만 보유 주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추가 과세제도 신설
  - 주택 전매세(Home Flipping Tax)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매각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연방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주정부에서 과세
- **(보유세)** 아일랜드는 빈집세 세율을 상향(재산세 대비 5→7배)

[표 3]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 재산세제 개편 동향

구분		주요 내용
거래세	취득세	(아일랜드) 10호 이상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10→15%) 150만 유로 초과 주택 구입 시 기본 인지세에 추가로 6% 과세
	양도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년 미만 보유 주택 매각 시 그 수익에 최대세율 20% 과세
보유세		(아일랜드) 빈집세 세율을 기존 재산세의 5배에서 7배로 상향 조정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2025.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탄소중립 및 국민건강 증진

▪ **유럽을 중심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세·유류세, 화석연료 자동차세 등 환경 관련 과세 강화**

- 아이슬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 등은 전체적인 탄소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일부 국가는 수송용(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및 농업(덴마크) 분야까지 탄소세 부과 대상 확대
- 유럽(독일·네덜란드·영국)을 중심으로 항공세 인상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운항거리 기반 차등 과세를 도입
- 다만, 일부 국가들은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친환경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정책 축소
  - 네덜란드는 무공해차 자동차세 면제 단계적 폐지 계획, 핀란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과세 인상, 헝가리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폐지 등

▪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아일랜드, 오스트리아는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관련 시설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표 4] 저탄소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국 소비세제 개편 동향

구분	주요 내용
탄소세	(아이슬란드·아일랜드·노르웨이·슬로베니아) 탄소세율 인상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각각 수송유, 농업용 석회 및 가축, 국제운송, 광산물로 과세대상 확대
유류세·항공세	(에스토니아·뉴질랜드) 수송용 유류세율 인상, (독일·영국) 항공세율 인상, (네덜란드) 운항거리 비례 항공세율 부과
자동차세 등	(네덜란드) 무공해차 자동차세 면제 단계적 폐지 계획 (핀란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과세 인상 (헝가리) 자동차세 인상 및 하이브리드차 자동차세 면제 폐지 (라트비아) 자동차 운행세 10% 인상
부가가치세	(아일랜드) 히트펌프 공급 및 설치 부가가치세율 23% → 9%로 인하 (오스트리아) 태양광 패널 공급 및 설치 영세율 적용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2025.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주류 및 가당음료에 대한 과세 강화

- **(담배세)** 일부 국가에서 담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영국 및 스페인 등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새롭게 담배세를 과세
  - 영국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담배세를 인상하였고,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1ml당 22펜스)에도 니코틴 함량에 따라 차등 세율 적용 신설
- **(주세)** 핀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등 세율 인상
- **(가당음료 과세)** 영국은 기존 세율을 물가와 연동하여 상향 조정, 에스토니아는 과세 신설
  -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설탕사용 억제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가당음료에 과세하는 소비세(일명 설탕세) 제도를 운영 중(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표 5]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국의 소비세제 개편 동향

구분	주요 내용
담배세	(불가리아·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 모든 담배 세율 인상 (캐나다) 일부 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영국·아이슬란드·아일랜드·폴란드·스페인)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과세
주세	(에스토니아·핀란드) 매년 세율 인상, (영국) 세율 인상
설탕세	(영국) 물가연동 세율 인상, (에스토니아) 가당음료에 설탕세 신설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2025.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역개발 및 투자활성화

▪ 지역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제와 소비세제 활용 증가

-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아르헨티나는 개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폐지하고, 네덜란드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10.4%에서 8%로 인하(2026년 이후)
- 사우디아라비아(해외투자 유치)와 인도네시아(누산타라 수도개발[2])는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시행

2)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의 군도 중심부(북부)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는 2045년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수도이전 프로젝트임

- 멕시코는 지방산단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내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시행
- 독일과 아랍에미레이트(UAE)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펀드 또는 가상자산 운용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표 6] 지역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재산세제 및 소비세제 개편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지역개발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아르헨티나) 부동산 취득세 폐지, (네덜란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10.4→8%)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부동산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감면
투자활성화	(독일) 벤처캐피털 및 대안투자펀드(AIF) 운용 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UAE) 가상자산 양도 및 운용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시행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2025.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다수 국가들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면세를 활용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표준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수 기반 확충 조치도 병행**

- 세수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이 부가가치세율 상향됨
  - 부가가치세 최고세율 추이(%): (OECD 회원국 평균) '00년 19.2% → '25년 19.4%
    (G7 회원국 평균) '00년 15.7% → '25년 16.0%

[표 7]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개편 동향

구분	주요 내용
세율 인상	(핀란드) 24 → 25.5%, (에스토니아) 22 → 24%, (슬로바키아) 20 → 23%, (이스라엘) 17 → 18%, (룩셈부르크) 16 → 17%, (싱가포르) 8 → 9%, (스위스) 7.7 → 8.1%

자료: OECD, 「Tax Policy Reforms 2025」, 2025.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타 재산과세 및 소비과세

▪ **코로나19 이후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과세 부담 완화**

- 아르헨티나는 부유세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세부담 완화
- 덴마크와 독일은 세율 인하 또는 공제한도 조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세부담 완화
  - 덴마크는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증여세 세부담 상승으로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
  - 독일은 사망자의 장례비와 상속재산정리 및 분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제한도 상향 조정

▪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강화**

- 디지털서비스 및 제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강화를 위해 일본, 페루 등은 국외 디지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 부과
  - 일본은 거래액 50억엔 초과 국외사업자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세 납부 의무 부과(2025년 플랫폼 과세 도입)

* 참고로, 한국은 2015년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국외 전자적 용역 공급자에게 간편사업자 등록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부과

발간등록번호 | 31-9700484-001731-14 ISSN | 2672-0280
발행처 |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담당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문의 | 02-6788-483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